

대량 해고, 외주 용역화,
차별 영구화하는
무기계약직화

이것이
비정규직
‘보호’인가

뉴코아·이랜드
점거 파업을
지지하라

» 관련 기사 6~7, 11면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인터뷰

— 한미 FTA 체결과
반대 운동의 과제

3면

국제뉴스

— 팔레스타인의 배신자 파타
— 미군 증파와 이라크 저항

8, 10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 도시 빈민과 노동 계급

8면

‘내신 싸움’의 본질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정책위원

2면

김성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2007 대선과 진보대연합

4면

존 몰리뉴 칼럼
— 국제 공산주의 운동 II

9면

http://www

counterfire.or.kr

<맞불> 온라인 기사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호는 ‘맑시즘2007’ 준비로 이
를 늦게 발행합니다.

사학법 · 국민연금법 개악 반대한다

» 관련 기사 12면

“인용해도될
까요?”

“만삭의 몸으로 부른 배를 굽혀 가며 커피 심부름 등 교장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성심 성의껏 해왔다. … 12년간 한술밥을 먹은 저에게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해고한다는 무책임한 말만 들려왔을 땐 정말 분하고 원통했다.”

— 자살을 기도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수운 씨

“20년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킥서 비스, 문자메세지로 소환장이 날아 오는 것은 처음 본다.”

—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이명박 후보가 전과 14범이라는 말이 있다.”

— 박근혜 캠프의 폭로

“반한나라당이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

— 문희상

“난파선에 사람이 한 명 더 타면 배는 빨리 가라앉는다.”

— 손학규의 범여권 합류를 비꼬는
노회찬 의원

“목숨 걸고 한미FTA에 반대 단식을 했던 분이 찬성한 이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집권하면 결국 제2의 노무현 정권밖에 안 된다.”

— <경향신문> 이대근 편집부국장

“가고 싶은 군대요? 돈 백만 원 줘도 안 간다. …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집단이[고] …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다. … 월급 준다고 해서 누가 가겠나.”

— 군가산점제를 지지하며 무심코
군대의 본질을 폭로하는
변호사 전원책

단병호 · 천영세 의원 소환

진보정당에 대한 야비한 정치 탄압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후원을 불법화한, 정치자금법의 독소 조항을 이용한 검찰의 정치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2004년 총선 직전, 민주노총으로부터 각각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동당 단병호 · 천영세 의원을 소환했다.

지난 6월에도 검찰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불법’으로 언론노조의 후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선을 앞둔 민주노동당에 ‘부패’ · ‘비리’ 혐의를 덧씌우려 애썼다. 언론노조만이 아니라 이제 민주노총 산하 16개 산별노조 후원금을 모두 문제 삼아 탄압의 범위를 확대할 기세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동당 지지를 위한 정치자금 모금을 공개 결의했다. 그래서 조합원 21만여 명이 1인당 2천 원씩, 4억



2006년 5 · 31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하는 천영세 · 단병호 의원

2천만여 원을 모금한 것이다. 이런 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모금과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용돈으로 2백만 원씩 줬다”는 전 의사협회장 장동익의 음성적 로비가 “유사하다”는 <조선일보

>의 주장은 어이가 없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과 관련해 7년이 넘는 수사 기간 동안 이견회를 한 번도 소환한 적 없는 검찰이 ‘불법’ 운운하며 단병호 · 천영세 의원

을 소환하겠다는 것도 우습다. 이 충성스런 ‘삼성 장학생’들은 ‘X-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기소해 오는 7월 9일 법정에 세우려고 한다.

이처럼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것은 “2007 대선 양강 구도를 위해 진보정치 세력을 위축시키려는 노무현식 공안 정국의 음모”(권영길 의원)다. 한미FTA 반대 운동을 앞장서 이끌어 온 민주노동당이 범여권의 지리멸렬로 생긴 공백을 메울 조짐을 보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민주노동당 탄압을 중단하고, 삼성 이견회의 불법 증여, 의료법 로비, 노무현의 풀리지 않은 2002년 대선 자금 의혹 등 지배자들의 산적한 부패나 제대로 조사 · 처벌해라.

조명훈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의 확대

광기어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난 6월 14일 검찰은 ‘일심회’가 “조직, 규율, 강령, 통솔지휘 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조직은 2명 이상이면 결성이 가능해[고], 주체사상과 한민전 규율을 따르겠다는 ‘인식’만 있으면 이적단체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했다.

이런 식이면, 어떤 두 사람이 커피전문점에서 만나 ‘주체사

상’을 토론하면 그 자체로 ‘이적단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마녀사냥이 더 확대되고 있다.

6월 한 달에만 5명의 한총련 대의원들(최승희, 이무진, 박준의, 장송희, 천기창)이 ‘학생운동 배후조직’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은 14기 한총련 의장 장송희 씨가 타고 가던 광주행 고속버스를 톨게이트에서 무단으로 세우고 폭력 연행해 가기도 했다.

그러나 광기어린 마녀사냥에 맞선 항의도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적표현물로 낙인찍힌 이시우 씨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각종 사진전과 행사들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 박준의 당원의 구속에 강력한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총련에 대한 연대 성명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현 정권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진보진영의 반발을 억눌러야 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탄압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옳게 지적했다. 정치적 입장 차이를 떠나 사상 ·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힘과 지혜를 모아 싸워야 할 때다.

이우봉

한국사회포럼 국가보안법 워크숍
“마녀사냥이 돌아왔다! — 2007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해”
일시 : 2007년 7월 7일 오후 7시
장소 : 덕성여대 한국사회포럼 행사장

민중과 상관 없는 ‘내신 싸움’



하재근(‘학벌없는사회’ 정책위원)

정부는 내신 강화가 한국 교육문제를 풀 비방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반면, 이른바 일류대학들은 한사코 내신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일류대학들이 중상층 자녀들을 위한 입시정책을 펴왔다는 건 상식이다. 일류대학들은 왜 내신을 싫어할까?

내신이란 건 일종의 할당제다. 내신이 사라지면 이 할당이 없어지고, 전국의 아이들이 성적순으로만 대학에 가게 된다.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선발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왜 성적도 나쁜 아이들이 내신 할당이란 특혜를 받는단 말인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성적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상관없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조물주의 조화로 서울 강남에는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태어나고, 강북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다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전라도에서는 공부를 안 할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하단 말인

가? 그런데 현실에서는 분명히 지역에 따라 아이들 성적이 나뉜다. 왜 그럴까?

아이의 성적이 부모의 재산과 문화자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온다는 생각은 한국 사회에선 망상이 된다. 사교육비를 최대한 많이 댈 수 있고, 거기에 여유 있고 학력 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는 아이들이 가장 성적이 잘 나온다.

만약 내신 없이 전국 성적순으로만 아이들을 선발한다면 결국 부모 재산순으로 아이들이 나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못 사는 집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그런데 내신을 강화한다고 해

서 성적과 부모 재산이 연동되는 입시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할까? 전국 단위 성적 경쟁의 관건이 부모 재산이었듯이, 학교 내의 성적 경쟁에서도 관건은 부모 재산이 될 것이다. 내신 강화를 둘러싼 대립은 서울 강남 부자와 지방 토착 부자간의 대립일 뿐이다. 민중의 자식은 이 입시 구조 속에서 전형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들리리만 설 뿐이다.

성적순

내신이 강화돼도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입시 경쟁으로 겪는 고통도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 심화할 수 있다. 고등학교 내신으로 대학 선별을 하게 되면 학생은 고등학교 기간 3년 내내 입시를 치르게 된다. 단 한 번 치르는 입시

로도 피가 마르는데 어떻게 3년 내내 입시를 치르란 말인가? 잔혹한 일이다.

문제는 대학서열체제다. 전국 1위 서열 대학이 존재하고 그 대학에 들어가려는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민중은 영원히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왜 특정 대학이 최고 성적 아이들을 총망라해서 독식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문제점을 바로 보지 못하면 내신 강화 같은 엉뚱한 대립으로 사회의 역량이 소모되게 된다.

왜 우리가 입시 경쟁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입시 경쟁제도 존폐를 둘러싼 대립이 주전선이 돼야 한다. 오직 이 전선만이 민중의 실질적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진정한 전장이다.



“한미FTA를 막아내 진보진영의 도약을 이룩시다”

한미 정부는 결국 6월 30일에 한미FTA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한미FTA 반대 파업을 하는 등 한미FTA 반대 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태인 교수를 만나 한미FTA 투쟁 평가와 전망을 인터뷰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얼마 전 급하게 재협상을 끝냈고, 결국 한미FTA 체결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협상 내용은 최강의 FTA입니다. 또 협상 내용에 미래 MFN(최혜국대우)이 들어 있어서 다른 나라에 더 좋은 조건을 주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 FTA의 모범이 될 겁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할 때 이렇게 깎아야 한다는 표준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강한 FTA입니다.

또, 전략적으로 전혀 준비를 안 했고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연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 끌려 다녔습니다. 언제나 미국은 막판에 모든 걸 요구하거든요. 협상 이틀 더 하면서 많은 걸 얻어냈고, 재협상 하면서 또 얻어내고, 앞으로도 또 협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질질 끌려 다니면서 모든 걸 퍼준 협상입니다.

이 협상의 결과로 결국 제조업 포함해서 전 산업에 걸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 제조업에서는 이득을 본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 그 결과로 시장 만능의 사회가 될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 의회의 비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아마 정치 일정이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9월에 [비준을] 시도하겠지만, 한나라당에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다된 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가 떨어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태도 즉 “찬성한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대선까지 끌고 갈 겁니다.

또,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통과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비준은 빨라도 5월입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비준을 해주진 않을 겁니다. 미국은 ‘마지막 살점까지 뜯어먹는 하이에나’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자동차나 쇠고기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보장을 받기 전까지는 비준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동차나 쇠고기는 계속 요구할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걸 다 양보해서라도 빨리 하고 싶겠지만, 우리 나라 정치 일정 때



한미FTA 반대 투쟁은 진보진영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1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총선이나 대선이 들어있는 중요한 시기예요. 전 국민적 토론이 열리기 때문이죠.

한나라당·열우당·통합신당 등은 한미FTA 의제를 물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워낙 엄청난 의제이기 때문에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점이 한미FTA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미FTA 반대 운동을 평가하신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왔고, 그래서 한미FTA 반대 여론이 한 50퍼센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10~12개월을 전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미FTA의 본질을 국민들이 알기만 하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대선·총선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범국본이 잘 해 왔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금속노조가 한미FTA 반대 파업을 했고, 정부나 언론들은 정치파업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정부의 탄압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1996년 겨울 생각이 나요. 그 때 김영삼 정부가 공안정국 조성하고 노동약법을 통과시키면서 ‘야, 한나라당 집권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정부가 어떻게든 한미FTA를 마감하기 위해 탄압

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악수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언론 등을 장악해 50퍼센트의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반대 운동을 탄압함으로써 오히려 왜 이런 FTA를 하는지 본질이 드러날 겁니다.

금속노조가 올바른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중요한 논거는 “자동차 산업이 최대 수혜 산업인데 왜 반대하느냐, 정치파업이다”는 거죠.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문제였다면 이번 파업은 [이를 극복한] 정치파업입니다. 자동차가 수혜 산업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죠. 만약 혼다나 도요타 자동차가 저가로 수입되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물론 금속노조 조합원 전체가 한미FTA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투쟁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파업을 함으로써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쟁이 촉발되게 만든 것도 성과입니다.

제조업 노동자들도 이제는 한미FTA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도 금속노조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나서야 합니다.

이번 파업이 앞으로 투쟁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활동가들이 한미FTA 반대 운동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이 투쟁은 운동 전체도 그렇고 특히 민

주노동당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최대 이슈이고, 이 이슈를 지역에서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의 여러 현안과 한미FTA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엮어내면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사실 진보진영의 가장 큰 적은 [대중의] 무관심입니다. 한미FTA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리면 진보진영이 한 단계 올라설 겁니다.

이 투쟁은 진보진영이 지역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지역 강연을 여러 번 해봤는데, 지역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사람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현안 문제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지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번 한미FTA 반대 투쟁은 우리가 이깁니다. 알기만 하면 찬성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상위 10퍼센트를 제외하고는 알기만 하면 반대할 겁니다. 총선·대선이 끼어있다는 것이 행운이죠. 한미FTA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진보진영이 대중에게 대안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인터뷰 · 정리 강동훈

정태인 교수는 ‘다함께’가 주최하는 진보포럼인 ‘맑시즘2007’에서 ‘한미FTA와 한국사회 - 협정문을 파헤친다’(7월 15일 12시)란 주제로 연설한다.

한 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을 했니 안 했니, 고소를 하니 마니 눈뜨고 보기 힘든 진흙탕 싸움을 해도, ‘차떼기’ 불법 선거 자금은 이미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듯 여론조사는 압도적인 한나라당 지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이비 개혁세력은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탈당한 한나라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 들여 대통합·소통합·이합집산의 눈속임으로 현혹시키려 하지만 국민들은 요지부동 마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국민들은 사이비 개혁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고 있으며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대선은 해 볼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매국적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 수만 명의 노동자·농민들이 길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확산법 시행 첫날 1천여 명이 넘는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의도 길바닥은 사학법 개악과 국민연금법·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농성 텐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절망하고 있으며 절망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진영은 이러한 절망에 대답해야 하며, 이러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칭 ‘좌파 신자유주의자’ 노무현 정권은 어지간히도 ‘진보’를 욕 먹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보인 양 착각하면서, ‘무능한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는 한나라당의 손가락질을 전체 진보진영으로 돌려 버렸습니다. 사이비 개혁세력이 진보인 것처럼 국민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 시대의 진보는 적어도 탐욕스런 투기 자본만 자유롭게 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입

왜 진보대연합인가? ①

— 김성진(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장)



6월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 추진을 설명하는 김성진 특별위원장

진보대연합, 그 길로 함께 갑시다

니다. 투기 자본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고서는 우리 민중의 삶은 더욱 파멸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사생아인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지 않고서 우리 사회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전쟁 반대와 호혜평등의 평화는 변함 없는 인류의 가치이며,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한반도 평화 통일은 빠뜨릴 수 없는 진보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난도질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국민소환제를 비롯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 역시 전체 진보진영의 몫입니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진보입니다. 사이비 개혁세력과

분명한 선을 그을 때,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때 새로운 희망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보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정치세력이 함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진보대연합입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 안에서 가장 큰 집단에 속합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아니지만 사이비 개혁세력에 반대하는 많은 진보적인 세력과 국민들이 있음을 압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와 당의 구조 등 이러저러한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변화를 두

려워하지 않고 당의 “기득권에 연연함이 없이” 진보대연합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낮게는 정책연합에서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연합, 나아가 통합 진보신당의 창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모색, 진보대연합을 성사시켜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기득권에 연연함이 없이”

이것이 지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전체 진보진영의 앞날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이자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진보대연합이 소위 상층 교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참여하는,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보대연합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 우리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보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내세울 선거 공약과 정책은 우리 민중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 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보단일화 과정이 선거인단에 의한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 역시 우리 민중이 함께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보대연합 역시 매우 폭넓은 상대가 있고 견해도 다양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도 서로 다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말 될까 하는 의구심 어린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고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또한 ‘함께하는 일’의 기본일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니만큼 정책연합으로 끝날지 혹은 통합 진보신당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 걸음 더 우리 민중 곁으로 다가설 수 있다면 그 만큼 우리는 진전을 이룬 것이 될 것입니다.

진보대연합, 그것이 길이라면 어깨 걸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진 특별위원장은 ‘앞시즘 2007’에서 ‘2007 대선 — 진보대연합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7월 15일 오후 7시 30분)란 주제로 연설한다.

시대착오적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1999년 12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한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군가산점 제도’를 8년이 지난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부활시키려 한다.

6월 22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의원 고조흥이 입법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군가산점 부활안)을 통과시켰다.

군가산점 부활안의 핵심은 군 복무자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기업, 학교, 20인 이상 사업장의 채용시험에 응

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 군 미필자들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06년 9월을 기준으로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1.5퍼센트에 불과하고, 이조차도 직급이 높아질수록 뚝 떨어진다. 5급 공무원 중 여성은 9.4퍼센트, 3급은 4.3퍼센트였고, 1급과 2급은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

현재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16.4퍼센트, 7급 여성 합격자의 31.9퍼

센트가 군가산점 적용시 불합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가산점이 적용된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99명 중 가산점 없이 합격한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했다.

물론 젊은 시절에 짧지 않은 시간을 억압적인 군대에서 보낸 이들에 대해 사회적 보상은 필요하다.

더구나 국회의원 아들들의 병역 면제율(23.5퍼센트)이 일반인(2.5퍼센트)의 10배에 가깝고, 재벌그룹과 언론사 사주 일가의 병역 면제율(56.5퍼센트)은 일반인보다 22배나 높은 현실은 정당한 불만과 보

상 욕구를 키우게 한다.

그러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몇몇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군가산점제는 ‘보상’ 역할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쓸모 없는 제도다. 오히려 모든 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복무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군복무 기간 임금을 실질화 하고, 제대군인들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징병제를 모병제로 대체할 필요도 있다.

억압적인 징병제에 대한 보상으로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

류민희

파병 연장

대국민사기극을
집어 치워라

김어진(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노무현 정부가 올해에도 파병 연장 사기를 재탕했다. 지난해 정부는 파병 연장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안에 철군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6월 28일 제출된 국방부의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 계획서’에는 철군 방침도, 철군 시한도 없다.

국방부는 한미FTA 협정문처럼 이 계획서를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논평을 통해 정부에 협조할 뜻을 나타내며 이 사기극에 동참했다.

이런 사기극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국방부가 ‘대국민사기 계획서’를 발표하자마자 이영순·임종인 의원 등 반전평화 의원들이 즉각 “철군시한 없는 임무종결 계획서는 국민 우롱”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음 날에는 국회의원 19명이 연내 철군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병력 증파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 이라크 전략의 성과[8면의 관련기사를 참조하시오]를 9월경[에이] 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무종결 시기에 관한 최종 평가는 9월 중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군도 증파하는 마당에 자이툰 부대 철군은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벌자는 심산이다.

재탕

국방부의 ‘임무종결 계획서’는 ‘이라크 석유법’ 통과를 철군 불가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이라크 석유법에 따르면 이라크 유전지대 80개 중 63개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외국기업에게 30년 이상 넘겨줘 장기간 이윤을 뿜을 수 있도록 돼 있다.

7월에 이라크에서 ‘이라크 석유법’이 통과되면 쿠르트 지역 유전개발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전에 철군해야 하냐는 것이다. 이미 한국석유공사와 쿠르트 천연자원부 사이에서는 유전개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석유 때문에 철군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본 제국주의한테서 수탈당했던 역사를 이제는 한국이 이라크에서 재탕하자’는 선언이다. 중동에서 제국주의 만형 미국을 도와 제국주의 작은 형 노릇을 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거짓말과 사기는 이라크에서 그치지 않는다. 얼마 전 김장수 국방장관은 “아프간 지방재건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04년부터 한국 군대는 미국과 함께 지역재건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국 <국방일보>(2004년 1월 6일치)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서 파완(Parwan) 지역재건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재건팀은 말만 재건이지 실제로는 군사작전도 벌여 상당 수준의 보병 파견을 전제로 하고 있다.

레바논은 또 어떤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강변했던 레바논 파병 지역에서는 유엔군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파병 정책 5년은 거짓말과 사기극의 5년이었다. 하반기에 한미FTA 비준안뿐 아니라 파병연장안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이제는 비준 저지다



6월 29일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무현 정부가 결국 한미FTA ‘문지마’ 체결을 강행했다. 한미FTA저지법 국본은 이것이 “수세대에 걸쳐 국민 대다수의 삶에 고통을 안겨줄” 것이며 따라서 노무현은 이를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한나라당·조중동 ‘삼각동맹’은 ‘문지마’ 체결의 걸림돌인 금속노조에 대한 마녀사냥에 광분해 왔다. 한미FTA로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화 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금속노동자들이 ‘큰 혜택을 본다’는 거짓말로 서슴지 않았다.

‘행복도시울산만들기시민협의회’라는 우익단체는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파업 반대 시위도 했는데, ‘울산공장 견학하는 줄 알고 전세버스 타고 왔다’는 노인들이 참가비를 받는 모습이 발각되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은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금속노조 지도부에게 문자메시지와 쿼서비스까지 이용해 기상천외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런 마녀사냥과 탄압에 일부 타협해 현대차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축소 한 것은 아쉽지만 금속노조는 28~29일 부분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했다. 11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고 이틀 간 전국 곳곳에서 수천~수만 명이 참가한 집회도 열렸다. <조선일보>는 이 파업으로 수백억 원의 생산 차질이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4월 2일 한미FTA 협상 타결 직후에 30퍼센트였던 한미FTA 반대 여론이 최근 37퍼센트(한길리서치 조사)까지 올라간 것은 이런 투쟁 덕분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광분하며 금속노조를 탄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저들은 금속노조 파업을 흠집 내고 보복하는 데 광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 조·반장들이 라인을 가동하려고 한 것을 두고 “조합원들이 파업을 막으려 했다”며 왜곡한다.

파업으로 전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것이 명백한데도 “조합원의 3분의 2가 파업을 거부했다”고도 한다. 퇴근하면 수당·상여금까지 깎겠다는 회사의 협박에 일부 조합원들이 휴게실에서 시간만 때우고 있었던 것을 부풀리는 것이다.

첩첩산중

현대차 사측은 현대차 노조지도부 23명과 기아차 노조지도부 8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하겠다고 했다. 정갑득 위원장 등 금속노조 지도부 17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검거작전은 이미 시작됐다. 금속노조 파업 관련 수배자만 50명이 넘을 듯하다.

노무현 정부는 마구잡이 소환장·체포영장 발부, 집회 불허, 무더기 구속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봉하러 한다. 6월 29일 집회 때는 무려 1백41개 중대 1만 3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집회를 가로막았다.

반면 한미FTA 체결 관련 문서들은 3년 뒤에나 공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범국본의 지적처럼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노무현은 “민중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정책적·도덕적으로 파산”했다.

금속노조 파업과 6월 29일 총궐기로 결집했던 한미FTA 반대 운동은 이제 이런 탄압에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이후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9월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고, 연말 대선에서 한미FTA는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한미FTA가 양국 국회에서 비준되기까지는 아직 “첩첩산중”이라고 언론들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 민주당은 사실상 한미FTA 비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자동차와 쇠고기에서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부시의 중간 선거 패배와 레임덕이 한미FTA 비준의 앞날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미FTA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재앙적 피해를 때문에 대중적 반감과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국회 비준과 대선 등 주요 고비마다 대중적 저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은 다시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은 7월 1일 비정규직 악법 시행 이후 벌어지는 비정규직 투쟁에도 연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에 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한미FTA의 미래가궁금하다면 이랜드를 보라”고 말하고 있다.

더 거대한 대중 행동과 더 강력한 파업을 건설하며 다음 투쟁을 준비하자.

이정구·전지윤

비정규직 악법과 대량 해고

정규직 · 비정규직의 단결 투쟁으로 맞서자

전지윤

7월 1일 비정규직 악법 시행은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함께 시작됐다.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6월 30일 뉴코아 비정규직 3백 명을 해고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는 "[결국] '2년 이상 정규직화'는 '2년 이내 계약해지 또는 용역전환' 조항이었으며, 비정규 '보호'법은 비정규 '확산'법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선일보〉는 비정규직 악법이 대량해고를 낳는 것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기업 현실에 눈을 감는 탁상 정책 탓"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악법은 냉혹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멋대로 부러먹고 해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이다. 자살을 기도했던 학교 비정규직 정수은 씨의 사례처럼 12년 간 온갖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은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비정규직 악법은 한미FTA가 요구하는 '법 · 제도 개선'의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노무현은 "까르푸를 이긴 이랜드"를 들먹이며 한미FTA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뉴코아 · 이랜드 공동투쟁본부'는 1백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전체 직원의 90퍼센트가 훌쩍 넘는 것이 "이랜드의 현실"이며 "한미FTA의 미래"라고 말한다.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량 해고는 시작일 뿐이다. '2년 이내 정규직화'라는 조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3백 명 이상 작업장에서 벌어질 대량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을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악법을 지지했던 천정배 의원도 최근 뉴코아노조와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보완책은 "직무급 체계와 임금 피크제 도입 ... 우리은행의 사례처럼 회사와 정규직, 비정규직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랜드가 도입하고 있

는 '직무급제'와 우리은행의 '분리직군제'는 진짜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화'다.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 중 7만 명을 '정규직화'한다는 것도 '무기계약직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 임금 차별을 영구화하는 무기계약직은 '무기정역'일 뿐이라고 냉소하고 있다. 더구나 나머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 명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다.

무기정역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공격의 화살은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하게 될 것이다. 〈프레시안〉과 인터뷰한 뉴코아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가 계산대 업무를 전부 외주화(하고) ... 나면 정규직들도 부서가 이동되고 나중에 인원감축도 하겠지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악법은 노동자들의 저항도 낳고 있다. 〈이코노미21〉은 "비정규직 법은 '노사분규'라는 폭탄을 제조하는 공장"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곳곳에서 노사분규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증권거래소 · 청주대 · 롯데호텔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시작됐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건설노동자들도 전진하고 있다. 6월 4일부터 파업중인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24일부터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안산지역 목수 노동자들의 파업은 12일 만에 승리로 끝났고, 광주지역 건설노동자들도 투쟁을 시작했다. 울산 · 포항 · 전남동부 · 경남서부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4개 지역 통합 단일노조를 건설해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악법에 맞선 저항의 선봉은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악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아침에 이랜드 전국 매출 1위인 홈에버 상암점에서 무기한 점거 파업의 시작을 선포했다.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이 보여 주듯이 정규직 · 비정규직이 단결해서 단호하게 투쟁하는 것만이 비정규직 악법에 맞선 투쟁의 대안이다.



뉴코아 · 이랜드 공동 투쟁에 승리를!

전지윤

비정규직 악법이 시행되는 7월 1일은 이랜드 일반노조 노동자들의 홈에버 상암점 무기한 점거 선언과 함께 시작됐다!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이미 유동노동자 최초의 점거 봉쇄 파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1주일 동안 뉴코아 평촌점 · 동수원점 · 인천점 · 야탑점 · 일산점, 홈에버 면목점 · 야탑점 · 일산점 등에서 매장이 점거 · 봉쇄되고 매출이 중단됐다.

그동안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서서 통풍 부는 다리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일해 왔다.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에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지난해 83억 원의 주식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고 1년에 실임조로 1백30억 원을 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묵묵히 복종과 고통을 참아오던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을 사용하면 뉴코아 · 이랜드 매장들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 '유통을 멈춰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박성수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불을 지른 사람이 불을 끄려고 출동한 소방차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졌다고 비난하는 것과 마

찬가지다. 박성수가 대량해고와 외주 용역화라는 범죄를 저질러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저렴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은 노동자들이고 전체 노동자의 60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박성수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야말로 '고객의 불편'을 낳는 일이다.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를 쓰는 것은 하루 소망을 못하는 것에 비할

수 없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불편'이다. 이 때문에 고객들 중에서 "당신들을 이해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회대의 '개혁사기꾼'인 노무현이 박성수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박성수의 용역강패와 노무현의 경찰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노동자 투쟁을 막아섰다. 심지어 6월 29일에는 마포서 경찰이 사복을 입고 파업 대열 속에 몰래 숨어서 노동자들을 감시해

왔다는 것도 밝혀졌다.

박성수와 노무현이 하나가 돼 더러운 탄압을 가하고 있다면,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가 돼 아름다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단결해서 단호하게 투쟁하고 있는 뉴코아 ·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눈빛 속에서 노동운동의 희망이 떠오르고 있다.

단호한 투쟁에 대한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이랜드 그룹에서 전국 매출 1위이며 주말에는 하루 매출이 10억 원이라는 상암점 점거 파업에 박성수는 오던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을 사용하면 뉴코아 · 이랜드 매장들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 '유통을 멈춰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박성수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불을 지른 사람이 불을 끄려고 출동한 소방차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졌다고 비난하는 것과 마

찬 타결짓고 나머지 한 쪽을 고립시킨 다음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뉴코아, 이랜드의 모든 노동자들이 흔들림없이 공동 투쟁하고 공동 타결한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점거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고 연대가 강력하지만 하다면 경찰력 투입도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이석형 위원장은 "16개 산별노조가 뉴코아 · 이랜드 투쟁을 총력 지원하기로 결의했고, 민주노총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약속은 반드시 행동으로 지켜져야 한

이렇게 합시다

경찰과 용역강패의 침탈 시도에 맞서 노동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당원 사회단체 회원들이 하루씩이라도 파업 대열 시수에 참여해야 한다.

파업 지지 기금을 모금하자

지금 파업 노동자들은 기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임금의 여성 노동자들이 간판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과 사회연맹은 물론, 여력이 있는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의 파업 지지 모금이 절실하다(여좌번호: 신한은행 212-11-013333 박운관)

7월 8일, 민주노총의 자원 투쟁에 동참하자

7월 8일 민주노총은 홈에버 상암점만이 아니라 각 지역 매장으로 점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의 노동자, 학생, 시민단체 회원들은 해당 지역의 투쟁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 〈한겨레〉 생활 광고에 파업 지지 광고를 실을 수도 있다. 노조 홈페이지(<http://www.danduk.org/>) 게시판에 지지와 연대의 글을 올릴 수도 있다.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과 학생회 단체 등에서 이런 내용들을 호소하자.

이랜드 불매운동에 동참하자

노동자들을 천대하고 탄압하는 이랜드 회장 박성수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 2001이물렛 불매운동에 동참하자.

현장 취재

억눌려 온 분노를 폭발시킨 여성 노동자들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월 30일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 6백여 명은 용역강패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뚫고 홈에버 상암점을 점거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이랜드 자본에 억눌려 온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었다.

목동분회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랜드는 비정규직에게는 계약해지를 남발하고, 정규직에게는 인사발령을 남발합니다. 외주화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계산분회 김명희 조합원은 "나는 정규직인데도, 보너스가 없는 달은 월급이 80만 원 조금 넘어요. 한 달에 1백만 원씩 받아보는 게 소원입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뉴코아노조 이은주 비정규직 대의원은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폭로했다. "2년 4개월을 일하고 해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계약해지를 문자로 통보하더군요."

안양분회 박복희 조합원은 노무현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노무현이 기타 치면서 눈물을 흘리더니만 그건 다 쇼에 불과했죠. 비정규직을 다 잘라내는 법을 만들고 ... 내 딸들도 비정규직으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노동자 자식들은 다 비정규직 되는 거 아니가요. 얼마나 억울한 세상입니까."

노동자들은 그동안 엄격한 감시와 통제, 인격모독과 멸시도 당해 왔다. "하루 종일 꼬박 9~10시간을 서서 일해야 해서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4시간만에 1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져 화장실도 못 가죠. 방광염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노동자들은 그동안 엄격한 감시와 통제, 인격모독과 멸시도 당해 왔다. "하루 종일 꼬박 9~10시간을 서서 일해야 해서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4시간만에 1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져 화장실도 못 가죠. 방광염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노동자들은 그동안 엄격한 감시와 통제, 인격모독과 멸시도 당해 왔다. "하루 종일 꼬박 9~10시간을 서서 일해야 해서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4시간만에 1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져 화장실도 못 가죠. 방광염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노동자들은 그동안 엄격한 감시와 통제, 인격모독과 멸시도 당해 왔다. "하루 종일 꼬박 9~10시간을 서서 일해야 해서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4시간만에 1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져 화장실도 못 가죠. 방광염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노동자들은 그동안 엄격한 감시와 통제, 인격모독과 멸시도 당해 왔다. "하루 종일 꼬박 9~10시간을 서서 일해야 해서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4시간만에 1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져 화장실도 못 가죠. 방광염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노동자들은 그동안 엄격한 감시와 통제, 인격모독과 멸시도 당해 왔다. "하루 종일 꼬박 9~10시간을 서서 일해야 해서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4시간만에 1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져 화장실도 못 가죠. 방광염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래 들어가서 울곤 하죠."

이런 울분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는 자세다. 조합원의 대다수가 중년 여성이다. 목동분회의 한 남성 조합원은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용역강패와 싸울 때도 물러섬이 없고, 항상 투쟁에 선봉에서 있죠. 우리 여성 조합원들이 너무 듬직합니다" 하고 말했다.

앞치마

6월 30일에 성공적으로 매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은 애초 계획한 이틀 간의 농성에 더는 만족하지 않았다. "어렵게 들어왔는데, 우리 발로는 그냥 못 나간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왔다.

안양분회 조합원은 "갑을 뺏으면 무라도 베야지, 정규직화 될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자리를 못 곳이 지켜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3차례에 걸친 분회 토론과正大 위 회의는 치열하고 열띤게 진행됐다. 진정한 현장 노동자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다.

결과는 모두를 흥분시켰다. 김명희 월드컵 분회장은 이렇게 발표했다.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의결을 모았다. 마지막 한 사람이 경찰에 연행될 때까지 매장을 지키기로 했다. 우리가 단결해야 우리 밥그릇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정당한 한가운데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이다." 커다란 함성과 호루라기 소리로 매장이 떠나갈 듯했다!

홍윤경 사무국장은 눈물로 연대를 호소했다. "대부분이 주부인 조합원들이 아래로부터 점거 파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이라도 대열에 함께해 주십시오."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을 라면 · 김밥으로 때우고, 차가운 바닥에서 종이박스 한 장에 몸을 의지하면서서 규율 있게 투쟁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뉴코아 노동자들도 전면 파업을 벌이면서 강남 뉴코아 등 주요 거점 타격 투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용역강패의 침탈, 경찰력 투입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노동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연대 투쟁이다.

이랜드 노동자들도 이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매칠 전 면목점 타격 투쟁 때, 택시 · 덤프 노동자들이 많이 와줘서 매장을 멈출 수 있었죠. 이번에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연대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설

미군 증파는 이라크 저항을 막을 수 없다

시몬 아사프

미군이 바그다드 북동쪽의 수니파 도시 바쿠바를 봉쇄한 채 30만 명의 이라크 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이라크 정부군의 지원을 받는 1만 명이 넘는 미군이 “알 카에다 단체들”을 색출한다며 바쿠바를 포위했다.

이번 공세는 2004년 11월 팔루자 공격 이후 미군이 벌인 최대 규모의 공격이고 조지 부시의 병력 “증파” 계획의 일부이다. 이것은 점령을 패배에서 건져내려는 필사적 도박이다.

그러나 미군 사령관들은 이라크군이 일단 도시[에서 저항세력]을 소탕해도 통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한 미군 사령관은 이 작전을 “시체 자루”로 묘사했다.

미군은 모든 탈출로를 차단한 채 민간인 거주지를 거듭 폭격해 놓고는 저항세력을 사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위 사령관들은 저항세력의 “80퍼센트”가 이미 공격 전에 달아났다고 시인했다.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역의 구호 활동가들은 미군이 구급차의 부상자 수송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마을에서는 미군이 마을 경비대를 학살한 뒤 그 경비대가 알 카에다 지지자

들인 양 암시하며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미군이 바쿠바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소탕·장악·건설”이라고 불린다. 미군이 여단가에 쳐들어가서 폐허로 만든 뒤 그곳을 재건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제위기그룹’(ICG)이 발표한 바스라 사례 보고서를 보면, 이 전략은 참담하게 실패했다.

ICG는 2006년에 영국군이 “저항세력을 소탕한 뒤 치안 관할권을 [이라크 보안군에] 넘겨주려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영국군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은 사실상 그들을 거리에서 갈수록 고립된 기지 안으로 몰아넣었다.”

ICG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바스라의

주민과 민병대원들은 이것을 [영국군의] 질서 있는 퇴각이 아닌 치욕적 패배로 간주한다.”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007호(6월 30일자)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7월 1일 조지 부시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장 밖에서 벌어진 반전 시위

제3세계의 도시와 노동계급

알렉스 캘리니코스

내년 중에 농촌 인구보다 도시 인구가 더 많아진다. 지난주에 UN이 펴낸 〈세계 인구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는 역사상 두번째로 거대한 세계적 도시화 물결을 겪고 있다.

최초의 도시화 물결은 유럽에서 1750년과 1950년 사이에 걸쳐 일어났고 4억2천만 명이 도시로 이주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화 물결은 주로 남반구에 영향을 미쳐, 아프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이 확장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아시아의 도시 인구는 거의 갑절이 돼, 26억 명에 이를 것이다. 같은 기간에 아프리카의 도시 인구는 4억 4천만 명이 늘 것이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도시 인구는 2억 명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토라야 오바이드 UN 인구기금 총무는 이렇게 경고한다. “[남반구의] 도시들은 대부분 이미 범죄,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 부족, 슬럼가 확산 등 이러저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두지 않는다면, [도시화는]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다.”

단지 ‘계획’이 없는 것만 문제는 아니다. 마이크 데이비스(Mike Davis)가 그의 중요한 저서 〈슬럼투성이 지구〉(Planet of Slums)에서 보여 주듯이, 남반구 도시들의 급격한 확장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남아공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학생 시위대

거대 농업 기업과의 경쟁으로 빈곤에 허덕이게 된 농민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도시로 몰려든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정착하게 되는 곳은 정식 도시 지역의 변두리에 있는 광대한 빈민촌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가하는 엄청난 압력 하에서 제3세계 나라들은 공공주택 건설 등 도시 주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 제공을 대거 포기해 왔다.

이런 변화들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남반구 대도시들의 성장을 전통적 노동계급 정치의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 여긴다. 정식 취업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도시 빈민, 즉 마이클 하트와 토니 네그리가 “다중”이라고 무차별적으로 부른 집단이 임금 노동

자들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하트와 네그리는 이 “다중”을 새로운 혁명 주체로 본다. 하트와 네그리의 분석을 기본적으로 공유하면서도 신자유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하기를 바라며 서구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들(NGOs)은 도시 빈민을 자신들이 자비심을 갖고 개입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희생자인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에는 [남아공] 케이프타운 외곽의 카예리차(Khayelitsa)에서 [케냐] 나이로비 주변의 키베라까지 대규모 빈민촌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곳들은 또한 주요 대중 파업이 잇달아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2007년은 기니의 독재자 란사나 콩테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낸 코나크리 시(市)[기니의 수도]의 총파업과 함께 시작됐다.

지난 몇 주 동안 아프리카의 두 주요 강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에서 대중 파업이 벌어졌다. 한 달 동안 지속된 남아공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의 다수는 지난주 정부의 임금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2주 전에는 나이지리아에서 공기업 사유화, 부가가치세와 유가 인상 등으로 촉발된 나흘 간의 총파업이 비슷한 타협으로 종료됐다.

이러한 협약들은 모두 전투적인 일부 파업 노동자와 도시 청년들한테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아무리 어정쩡하

다 해도, 이러한 파업들은 조직 노동계급이 아프리카에서 강력한 사회적·정치적 행위자임을 여실히 보여 줬다.

이것은 아프리카 사회들이 다른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오직 임금 노동자들의 노동 덕분에 돌아갈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임을 반영한다. 심지어 산업이 비교적 취약한 곳에서도, 교육에서 운송에 이르는 공공 서비스는 임금 노동자들이 제공한다.

남반구는 주민이 빈곤하고 자본주의 발전이 불균등해, 노동자들이 노점상 같은 일로 연명하는 도시 빈민 대중과 뒤섞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뜻하는 바는 정치적으로 예정돼 있지 않다. 때때로 노동자들은 중간계급 정치인들이 이끄는 포퓰리스트 운동에 말려들 수 있다. 그래서, 남아공의 파업은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지도권을 둘러싸고 타보 음베키 대통령과 전직 부통령 제이콥 주마가 벌인 다툼과 얽혔다.

그러나, 때때로 조직 노동계급이 집단적 행위자로서 강력히 나설 때 그들은 나머지 도시 빈민들을 이끌 수 있다. 남아공과 나이지리아는 모두 노동자 운동과 지역사회 운동이 연합해 기존 체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제기한 투쟁 역사가 풍부하다. 이런 일은 다시, 심지어 최근의 파업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벌어질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이자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의 유럽학 교수이고,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등 많은 책을 썼다.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

국제 공산주의 운동 Ⅱ

지난 호 칼럼에서 말했듯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초기(1919~23년)는 노동 계급 정치 조직의 역사에서 정점이었다. 그러나 유럽 혁명의 패배와 러시아 혁명의 고립, 그에 따른 스탈린주의의 발흥은 코민테른의 기본적 구실과 정책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스탈린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일국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레닌·트로츠키를 비롯한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모두 맑스·엥겔스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혁명을 근본적으로 국제적 과정으로 보았고 러시아 혁명을 국제 혁명의 첫 걸음으로 여겼다. 국제 혁명이 없다면 혁명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독일 혁명이 패배한 뒤 1924년에 이 국제주의 전통을 포기하고, 서방 자본주의에 의해 군사적으로 전복되지만 않는다면 러시아 일국에서도 사회주의 건설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이것은 코민테른과 코민테른 소속 정당들의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원래 이 정당들의 첫번째 과제는 자국에서 혁명을 추구함으로써, 자국 노동계급과 러시아 혁명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일국사회주의

이제 그들의 주된 과제는 옛 소련에 대한 군사 공격을 예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각국 공산당은 다양한 개량주의·민족주의 세력들과 동맹했다. 그들은 노동자 혁명의 관점에서는 결코 믿지 못할 세력이지만, 적어도 대(對) 러시아 전쟁에는 반대하도록 설득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우경화의 맨 처음 성과는 1926년 영국 총파업에서 나타났다. 1925년에 스탈린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 노동조합 연합은 영국 노동조합의 “좌파”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고 ‘영-러 노동조합위원회’(Anglo-Russian Trade Union Committee)를 결성해서 영국의 러시아 개입에 반대했다.

이 동맹은 영국공산당이 개량주의 노조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공산당은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고, 공산당 소속 노동조합원들의 독자적 행동 능력은 크게 위축됐다. 바로 그 때 광부들이 이끄는 영국 노동계급과 노동조합이 정부·지배계급과 대대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고, 그 충돌은 1926년 5월 전국적 총파업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공산당과 동맹한 바로 그 좌파 노조 지도자들의 비열한 배신으로 이 총

파업은 겨우 9일 만에 철회됐다. 더욱이 그 동맹을 중개한 코민테른의 방해 때문에 영국공산당은 노동계급에게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거나 그들이 배신할 경우 공산당원 투사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도록 준비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영국 노동계급은 패배했고 한 세대쯤 퇴보했다. 코민테른은 이 과정의 공모자였다.

근본적으로 이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재앙적인 사건이 1927년 중국에서 일어났다. 1925~27년에 중국 노동계급, 특히 상하이와 광저우의 노동자들은 제국주의와 봉건 군벌의 중국 지배에 맞서 대규모 반란 물결을 일으켰고, 신생 공산당도 급성장했다.

그러나 스탈린이 지배한 코민테른의 노선은 중국공산당이 장제스가 이끄는 부르주아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과 동맹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제스를 잠재적 러시아 옹호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7년 장제스는 자신의 동맹 세력인 공산당을 공격해서 말 그대로 대학살을 자행했다. 이 재앙의 즉각적 결과로 마오쩌둥은 농촌과 농민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전환했고, 그 뒤 중국의 노동계급 사회주의는 아직까지 실제로 복원되지 않았다.

이런 재앙적 정책들을 추진하는 동안 코민테른의 성격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스탈린은 대 중국 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낡은 멘셰비키·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되돌아가, 식민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를 위한 조건이 무르익

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맑스주의자들은 ‘진보적’ 민족 부르주아지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동시에, 각국 공산당 안에서는 일체의 비판과 민주적 논쟁이 사라졌고, 당 지도부는 훨씬 더 고분고분한 러시아 하수인들이 됐다.

민중전선

1928~29년 스탈린이 강제 공업화와 농업 집산화 — 러시아 노동자·농민을 쥐어짜는 국가자본주의 노선 — 를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행적을 좌파적 미사여구와 구호로 은폐해야 했다. 이 가짜 좌파 구호들을 국제 문제에 적용한 자연스런 결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을 “사회(주의) 파시스트”라고 비난하고 심지어 나찌에 맞선 일체의 동맹, 심지어 다른 노동계급 정당들과의 동맹조차 거부하는 종파주의 정책이 나타났다.

이 가짜 좌파 노선은 1929~33년의 결정적 시기에 독일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려서 히틀러의 집권을 크게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그 전의 우경화 전략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파시즘 문제는 다음 칼럼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나찌 독일의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자 스탈린의 코민테른은 또 한 번 방향을 전환했다. 노동자들의 공동전선조차 반대하던 정책에서 이제는 ‘민주적’ 부르주아지와 동맹하는 이른바 민중[인민]전선으로 전환한 것이다.

스페인 내전(1936~39년)이라는 시험대에서 이 민중전선 정책은 공산당이 프

1926년 영국 총파업을 이끈 광부들

랑코에 맞서 부르주아지의 일부와 단결한다는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발전하던 스페인 혁명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것은 혁명을 저지했을 뿐 아니라 스페인 노동계급의 사기를 떨어뜨려 프랑스의 승리를 도와주었다.

한편, 국제 공산주의에서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일국사회주의가 소련에서 가능하다면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생각이 점차 각국 공산당을 사로잡았다. 이런 생각은 소련에 대한 충성에 오랫동안 눌러 있었지만, 1950~60년대에 소련의 힘이 약해지자 스탈린주의 정당들에서 민족 개량주의 경향이 전면에 등장했고 결국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돼버렸다.

따라서 스탈린주의는 국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영향을 미쳤다.

첫째, 일련의 재앙적 패배를 초래해서 자본주의가 살아남고 파시즘이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둘째,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운동을 국제적 반혁명과 부르주아 개량주의를 위한 운동으로 변질시켰다. 다행히도 오늘날 스탈린주의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고 진정한 사회주의를 가로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나게 약화했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आय인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요르단에서 부시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총리 아리엘 샤론(오른쪽)과 손을 맞잡은 팔레스타인 대통령 마흐무드 압바스(왼쪽)

이스라엘과 서방의 도구로 변모한 파타

[편집자] 지난 6월 14일 하마스가 파타 산하의 무장세력들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축출한 뒤, 서방과 이스라엘,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의 하마스 고사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 6월 31일에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공습해 7명을 죽였다. 지난 <빛> 49호와 50호는 이런 위기의 배경에 압바스 대통령이 이끄는 파타의 하마스 정부 전복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랍계 사회주의자로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중동 문제 전문 기자인 **시몬 아사프**가 한때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이끌었던 파타의 성장과 타락을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이 글은 <소셜리스트 워커> 2066호(6월 23일자)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파타는 1960년대에 강국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 혁명 과정에서 등장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며 건국했다.

파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시기에 팔레스타인인들과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핵심이었다.

1960~70년대의 격렬한 게릴라 투쟁에 이어서 1987년 점령지 — 1967년 이스라엘이 강탈한 — 에서 제1차 인티파다(민중항쟁)가 일어났다.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맞서 PLO가 패배한 뒤 이 인티파다를 계기로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이 부활했다.

인티파다는 투쟁이 계속될 것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인티파다는 또한 1988년 PLO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역사적 팔레스타인에 유대인과 아랍인의 세속적·민주적 국가를 건설한다는 자신의 요구를 포기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기도 했다.

PLO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는 “두 국가 방안”을 받아들이고 1994년 오슬로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동예

루살렘과 헤브론 같은 도시들에서 조직적으로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요르단강 서안지방 팔레스타인 마을들의 솜통을 조이고, 팔레스타인인들의 토지를 빼앗고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하는 등 전혀 거리낌없이 행동했다.

PLO가 자신의 원칙을 포기할 때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는 오히려 인티파다를 꺾으며 급진화했다.

1988년에 그들은 하마스(이슬람 저항 운동)를 출범시키며 군사적 투쟁을 지속했다.

두 갈래길

이제 팔레스타인의 운동은 두 갈래길로 나아갔다. 파타는 자신을 팔레스타인 국가로 수립하고 이스라엘과 협상했다. 하마스를 비롯한 다른 팔레스타인 단체들은 군사적 저항을 지속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파타의 순응을 약점으로 여겼고, 파타가 통제할 수 없는 정치 협상 과정으로 파타를 더 깊숙이 끌고 들어갔다.

오슬로 협정은 아라파트와 파타에게 굴욕이었다. 그러나 최후의 타격을

가한 것은 이스라엘의 전범(戰犯) 아리엘 샤론이었다. 2000년 샤론은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있는 하람 알-셰리프, 즉 황금돔 사원으로 행진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쌓여온 모든 분노와 좌절감이 제2차 인티파다로 폭발했다.

샤론은 2001년에 이스라엘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이스라엘 탱크를 다시 요르단강 서안지방으로 진격시켰다.

양보 전략에 모든 것을 걸었던 아라파트는 라말라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가 이스라엘군에 포위당해 있을 때 사망했다.

그러나 아라파트의 뒤를 이은 파타 지도부는 2003년 이른바 “중동 평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도록 해 주겠다는 조지 부시의 약속에 매달렸다.

이스라엘은 파타에게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을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또, 팔레스타인 저항세력 전사들을 겨냥한 “표적 살해” 작전을 계속해서 특히 하마스의 정신적 지도자인 셰이크 아흐메드 야신을 암살했다.

하마스가 10년 간 휴전을 거듭 제안했음에도 이스라엘의 “표적 살해”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



http://www.socialforum.or.kr

한국사회포럼 2007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2007.7.6(금)~8(일)

전환시대,
새로운
희망을
말하자

- 87년 항쟁 20주년 — “87년 항쟁 20년, 민주화의 역설 :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운동” 2007.7.6(금) 10:00~13:00
- 평화통일 — 한반도 평화, 21세기 새로운 질서의 서막을 여는가? 2007.7.6(금) 19:30~22:30
- MF 외환위기 10년, 그 아반의 시대 2007.7.7(토) 10:00~13:00
- 2007년 대선과 진보진영의 대응 2007.7.8(일) 10:00~13:00
- FTA 저항 국제 민중 포럼 2007.7.6(금) 14:00~21:30
- 식량주권 토론회 2007.7.7(토) 13:30~18:30
- 베네수엘라의 개혁과 혁명 —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07.7.7(토) 16:30~18:30 주관 : 다함께
- “테러와의 전쟁”과 반전평화운동 2007.7.7(토) 19:30~21:30 주관 : 파병반대국민행동
- ‘삼성공화국’ 넘어서기 2007.7.7(토) 14:00~16:30

소식 · 보고

안산지역 건설노동자 파업 승리

안산지역 건설노동자 파업이 12일 만에 통쾌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안산지역 7개 현장, 5백 명의 목수들은 “10년을 참아왔다. 임금 인상 쟁취하자!”며 97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6월 19일 파업에 들어갔다.

건설사들은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파업을 파괴하려 했지만, 건설노동자들의 단호하고 거센 투쟁의 지 앞에 무릎꿇고 말았다.

이번 파업으로 일당 13만 원(목수기능공 기준), 노동시간 1시간 단축, 목수 직접고용, 무료취업알선센터 이용 등 건설노조가 내건 “파업 6대 요구”를 모두 쟁취했다.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무엇보다도 큰 의의가 있었다.

불법적인 단단계 하도급과 용역이 성행하던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가 목수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다.

안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승리는 수도권 일대 건설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줄 것이다. 또, 단호한 투쟁이 비정규직 약법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명하



단호한 투쟁으로 승리한 안산지역 건설노동자들

롯데호텔 여성 비정규직 해고와 투쟁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나” 했던 롯데호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바람은 무참히 깨졌다. 롯데호텔은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대비해 길게는 18년 동안 일해 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4명에게 사직서와 용역 전환을 강요했다.

이 여성노동자들은 호텔 주방에서 식기를 닦고 기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 왔다. 식기 세척기에서 나오는 스팀과 열

기로 한겨울에도 땀에 흠뻑 젖으며 일해야 했다. 그리고 받은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25퍼센트밖에 안 되는 72만~84만 원의 최저임금이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관리자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단 하루의 휴가도 쓸 수 없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외주용역화는 롯데호텔 비정규직 노동자 8백여 명의 해고와 외주용역화로 이어질

것이다.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 중부지구협, 그리고 민주노동당 중구 · 송파구위원회가 ‘롯데호텔비정규직대책위원회’를 건설해 연대를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정규직 노동조합인 롯데호텔노동조합은 지난 2000년 74일의 파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얻어낸 소중한 경험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

유병규

전국공무원노조의 위기 지금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 투쟁할 때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온갖 탄압과 박해를 받으며 지켜 온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지금 분열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책임은 우선 전적으로 악랄한 노무현 정부에게 있다.

노무현은 전공노가 노동3권을 부정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조합비 자동이체를 차단하는 등 광기 어린 탄압을 자행했다.

이런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많은 동지들이 징계 · 해고까지 감수하며 영웅적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오랜 탄압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지치게 했다.

결국 무자비한 탄압과 이간질은 전공노 안에서 분열을 낳기 시작했다. 특별법을 거부하고 법외노조로 남아서 싸우자는 ‘법외파’와 특별법을 수용하고 법내로 들어가서 조직력을

회복하고 싸우자는 ‘법내파’가 대립했다.

‘법내파’ 지도부에는 2004년 파업을 지도하고, 민주노총 가입과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등을 이끈 전임 지도부 계열도 섞여 있다.

독소조항

그러나 특별법은 노동3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많은 동지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구조조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분열만 낳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대의원대회에서 민주적 토론을 통해 ‘특별법 거부와 노동3권 쟁취’를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내파’ 지도부는 이런 결정 사항을 다시 뒤집는 것에

몰두하며 분열을 조장해 왔다. 급기야 ‘법내파’ 지도부는 전공노 지도부가 투쟁 집회를 개최한 6월 23일에 독자적인 대의원대회를 열어 전공노 지도부를 탄핵하고 ‘전국민공무원노조’를 출범시켰다.

‘법내파’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 구조조정 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행보는 특별법 수용과 지도권 장악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전공노 권승복 지도부는 특별법을 거부하고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말을 일관되게 실천하지 못했다. 1인 시위와 인권위 점거 등 소수 행동에 치중한데다가 특히 지난 3월 조건부로 특별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후퇴해, 투항을 거부해 온 활동가들을 혼란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렸다.

권승복 지도부가 ‘법내파’와 ‘법외파’ 사이에서 동요하며 보

여 준 무기력은 노동조합 좌파 지도부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다. 늦었지만 근래 권승복 지도부가 투쟁 건설에 집중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에 맞선 강력한 공동투쟁을 건설하며 특별법 수용 여부를 동지적으로 논쟁하는 자세다. ‘법내파’ 지도부는 이제라도 분열 조장 행위를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과 단결을 우선해야 한다.

전공노 지도부는 법내파 지도부의 분열 조장을 비판하면서도 구조조정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는 적극성과 개방성을 보여 줘야 한다.

전공노의 전투적 활동가들은 현장조합원을 속에서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건설하며 전공노가 지금의 위기와 분열을 돌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최영준 · 전지윤

독자편지

외대 당국은 또 다른 성희롱 교수도 처벌해야 한다

6월 25일 저녁 방송된 KBS <미녀들의 수다>에서 한국외대 일본인 유학생 사가와 준코 씨는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교수는 준코 씨에게 “나랑 같이 자면 수업에 아예 안 들어와도 성적을 주겠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중국 유학생 상팡 씨에게는 성추행까지 했다고 한다.

이 충격적인 성희롱 사건이 알려지자 다행히 외대 당국은 곧바로 진상조사를 하고, 하루만에 해당 교수를 해임했다.

외대에서 교수에 의한 성희롱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꼭 1년 전인 6월 26일, 이영태 용인캠퍼스 학생처장은 파업중인 여성 조합원에게 성희롱을 했다.

당시 외대 당국은 황당하게도 진상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해고당했고,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외대 학생 조명훈 동지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무기정학 징계를 당했다.

외대 당국은 이영태 학생처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 판결도 무시했고, 조명훈 동지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까지 했다.

외대 당국이 반복되는 교수 성희롱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영태 교수도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 또 억울하게 해고당한 성희롱 피해 여성을 하루빨리 복직시키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조명훈 동지에 대한 부당 징계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양재우

‘부시맨’ 블레어가 중동특사라니...

총리에서 쫓겨난 블레어가 물러나자마자 중동 분쟁을 해결하는 ‘평화특사’로 임명됐다. 한마디로 웃기는 상황이다. “부시의 푸들”인 블레어는 중동의 평화를 깨트린 장본인 중 한 명이다.

하마스는 특사로 임명된 블레어가 “총리 때부터 정직하지 못했고, 중동 분쟁 해결에 도움이 안 됐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블레어는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부시와 전 이스라엘 총리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올메르트와 함께 아랍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다.

블레어는 이라크에서 보여 준 전력처럼 팔레스타인에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킬 것이다. 로이터의 얼러트 닷에는 올리브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한 손에는 성냥, 한 손에는 휘발유통을 쥔 블레어가 이라크에 불을 지르고 팔레스타인으로 날아가는 만평이 실렸다.

김태현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증면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사학법 · 국민연금법 개악**‘열린·한나라당’은
개악 야합 중단하라**

장호중

노무현 ·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의 더러운 개악 야합이 다시 시작됐다. 사학법 · 국민연금법 개악안의 처리를 합의한 것이다.

사학법 개악은 누더기가 된 열우당의 양보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마무리됐다. 열우당은 지난 2년간 온갖 뒷거래와 양보를 통해 개방형 이사제만 남기고 사학법 개혁을 껌데기로 만들어 오다가 이번에는 마침내 개방형 이사제마저 무력화하고 말았다.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정책위원은 열우당의 배신 행위가 “개방형 이사제라는 단어 하나만 남기고 모든 실질적 내용을 스스로 삭제하는 거대한 허무 개그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폭로했다.

국민연금 개악도 심각한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대로라면 매달 2백만 원을 버는 노동자가 매달 보험료 18만 원씩 20년 동안(평균 가입 기간) 내도 고작 월 36만 원의 ‘용돈’만 받게 된다. 현재보다 3

분의 1이나 삭감한 것이다. 이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기초연금을 지급한다지만 고작 8만 원에 불과하고 20년 뒤에야 16만 원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될 뿐 아니라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퍼센트씩 떼고 준다. 장애연금도 없다.

유례 없는 연금 삭감에 <조선일보>조차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할 정도다.

이런 식으로 연금이 대폭 삭감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를 못 느낄 것이다. 그리되면 되레 훨씬 일찍 재정이 고갈되거나 너무 형편없어서 연금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다.

‘용돈연금화’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 지난 2004년처럼 다시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노후 생계를 사보험이나 개별 가정에 맡겨 두는 것도 노동자 · 서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현재

의 노인 빈곤과 저소득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는 너무도 명백하다.

따라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생계를 보장할 진정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용돈 연금

정부의 ‘재정고갈론’은 그 자체로도 허무맹랑한 것이지만,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수십 년 전에 연금 재정이 고갈됐어도 정부 예산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도한 후세대 부담’이라는 주류 정당들과 언론의 거짓말과 달리,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의 최대치는 GDP의 7퍼센트밖에 안 된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GDP의 10퍼센트 정도를 연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다.

기업주들과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보험료에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해야만 진정한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 정부

와 기업주들에게 이런 ‘양보’를 강제하려면 강력한 집단적 힘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사회연대연금노조 노동자 3천여 명이 연금 개악에 반대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박근혜 · 이명박의 선거사무소를 점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행동이 좀 더 일찍 시작돼서 더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발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말이다.

이 신문을 제작하고 있는 7월 3일 오후 현재, 사학법 · 국민연금법 개악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꽤 커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 문제는 올해 말 대선과 내년 총선까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아직 시행도 안 된 사학법을 재개정했듯이 우리도 국민연금법을 재개정할 수 있다.

노무현 · 열우당 · 한나라당의 개악 야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진보진영은 저들 개악동맹자들에 맞서 강력한 대중 투쟁을 건설하면서 진보대연합을 통한 정치 · 선거 대안 건설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저항운동의 축제

7월 14일 (토) - 7월 17일 (화)

장소: 고려대학교 주최: 다함께

마르크시즘 2007
MARXISM**주요 연사>>>**

린지 저먼 | 영국 ‘전쟁저지연합’ 사무총장, 영국 ‘리스펙트’ 런던시장 후보

존 리즈 | 영국의 급진좌파 정당 ‘리스펙트’ 사무총장

문성현 |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임종인 | 국회의원, 반전평화의원모임 활동

정태인 | 성공회대 겸임교수, 전 청와대 비서관

김민웅 | 성공회대 교수, <프레시안> 편집위원

김진숙 |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최일봉 | <맞불> 편집자,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저자

민세원 |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KTX승무지부장

우석균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대연 |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 한국진보연대(준) 정책위원장

정성진 | 마르크스의 경제학자,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마르크시즘2007은 50여 개의 토론과 진보적 영화, 음악, 사진전 등이 어우러지는 저항운동의 축제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장입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비 하루 9,000원 / 나흘 30,000원

할인 가격: ■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기투쟁직업장 노동자:

하루 4,000원 / 나흘 13,000원

■ 대학생, 실업자:

하루 6,000원 / 나흘 20,000원

더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마르크시즘’ 웹사이트(<http://www.marxism.or.kr>)를
참조하십시오.

